

KIPF ISSUE PAPER No.113

통권  
제113호

# 조세재정 브리프

2021. 9. 13  
[www.kipf.re.kr](http://www.kipf.re.kr)

## OECD Economic Outlook(2021. 5.)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

배경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 / [kjbae@kipf.re.kr](mailto:kjbae@kipf.re.kr)

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/ [whkim@kipf.re.kr](mailto:whkim@kipf.re.kr)

- 1 서론
- 2 OECD Economic Outlook(2021. 5.) 주요 내용
- 3 정책 시사점

참고문헌





## 요약

- ▶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 급증, 유가 상승,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올해 물가가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,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상방 리스크 발생\*이 우려됨
  - \* 상방 리스크(upside risk): 금리, 주가, 물가의 오름세나 침체된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가 예상한 기대치보다 웃돌 위험을 의미
  - 민간소비 증가로 수요는 증가한 반면,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로 인한 반도체 부족현상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
- ▶ 2021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6.75%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되며,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
  - 정부의 지원정책 등으로 일부 고용이 유지된 국가에서도 대면서비스 부문의 총노동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함
- ▶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노동시장 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재정부양책 중단은 지양해야 함
  - 2022년 말까지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는 2019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작스러운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지양해야 함
- ▶ 한국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지만,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뉴딜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·녹색 경제 발전의 속도를 더해야 할 것을 주문
  -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백신 수급 환경은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음

※ 본 조세재정 브리프는 OECD, *OECD Economic Outlook*, 2021. 5. 중 일부 내용을 발췌·요약한 것임

# 1 서론

- ▶ OECD Economic Outlook은 OECD가 연 2회 발간하는 세계 주요 경제 동향과 향후 2년간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이며, 각 회원국의 자료와 검토를 기반으로 고용, 정부지출, 물가, 경상수지 등에 대한 전망과 정책제언을 소개하고 있음
- ▶ 본고는 2021년 5월에 발간된 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것으로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주요 경제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함

## 2 OECD Economic Outlook(2021. 5.) 주요 내용

### ① 경제성장 전망

- ▶ 세계 GDP는 2021년 5.8%, 2022년 4.4%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지만, 감염병 위기 이전 전망했던 수준에는 2022년 말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
  -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 7% 수준까지 상승하지만 2022년 3.6%로 낮아질 전망이며, OECD 회원국은 미국의 상승세에 힘입어 2021년 5.3%까지 상승한 이후 2022년 3.8%로 낮아질 전망임
  -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생산량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반면, 유럽의 대다수 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더딘 회복 속도가 예상됨
- ▶ 세계 상품교역지수는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표출되면서 반등하는 추세이며, 세계 무역량은 2021년 약 8.25%, 2022년 6% 미만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임
  - 2020년 3분기 G7 국가의 총투자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, 민간소비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4.5% 감소한 반면, 일부 선진국에서의 투자는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함

〈표 1〉 세계 경제 전망

(단위: %)

구분	2013~2019	2019	2020	2021	2022
<b>실질GDP 성장률<sup>1)</sup></b>					
세계 <sup>1)</sup>	3.3	2.7	-3.5	5.8	4.4
G20 <sup>1)</sup>	3.5	2.8	-3.1	6.3	4.7
OECD <sup>1)</sup>	2.2	1.6	-4.8	5.3	3.8
미국	2.5	2.2	-3.5	6.9	3.6
유로지역	1.8	1.3	-6.7	4.3	4.4
일본	0.8	0.0	-4.7	2.6	2.0
Non-OECD <sup>1)</sup>	4.3	3.7	-2.3	6.2	4.9
중국	6.8	6.0	2.3	8.5	5.8
인도 <sup>2)</sup>	6.8	4.0	-7.7	9.9	8.2
브라질	-0.3	1.4	-4.1	3.7	2.5
<b>실업률(노동인구 대비 %)</b>	6.5	5.4	7.1	6.5	6.0
<b>인플레이션<sup>3)</sup></b>	1.7	1.9	1.5	2.7	2.4
<b>재정수지(GDP 대비 %)</b>	-3.2	-3.1	-10.8	-10.7	-6.0
<b>세계 실질 무역 성장률<sup>1)</sup></b>	3.4	1.3	-8.5	8.2	5.8

주: 1)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GDP의 이동 평균(moving nominal GDP weights,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)

2) 회계연도 기준

3)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(private consumption deflator)

자료: OECD, *OECD Economic Outlook* 2021. 5., Table 1.1.



- 내구재 수요 급증과 국제운송 병목현상으로 2020년 6월 이후 운송비가 상승하였으나, 백신접종 가속화로 수요·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2021년 말 운송비 상승세는 약화될 전망이다

## ② 금융시장 및 물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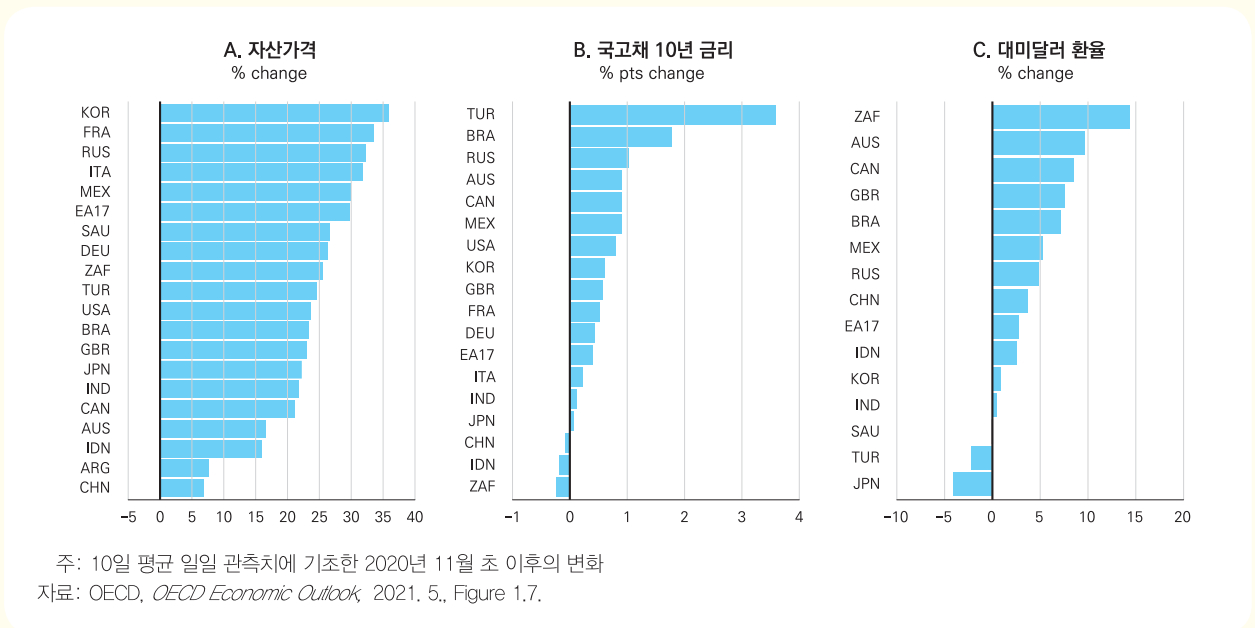
### 가. 금융시장 전망

- ▶ 미국의 상방 리스크가 구체화될 경우, 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미국의 채권수익률을 높이고, 이는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통화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
  - 백신접종 가속화로 인한 경제회복 및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국고채 10년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
  - 일부 신흥국의 국채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, 많은 국가에서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임
- ▶ 미국의 금리 상승이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동반할 경우, 금융시장의 부정적 파급 효과는 더욱 강력한 글로벌 무역 수요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음
  -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,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는 신흥국은 백신접종을 통해 일찍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
  - 중국 주도의 글로벌 성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도, 터키 등 원자재 수입국의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, 브라질, 칠레, 러시아, 남아프리카 등 원자재 수출국에는 반대의 영향을 미침

### 나. 물가 전망

- ▶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 급증과 공급 병목현상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

[그림 1] 2020년 후반 이후 강세를 나타내는 자산가격 및 일부 통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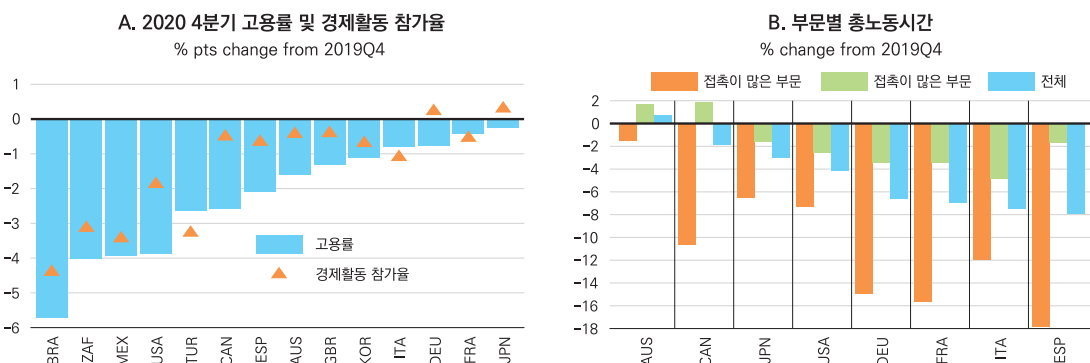


- 팬데믹으로 감소한 수요가 2020년 말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컨테이너 운임비용이 상승하였으며, 이 같은 운송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
- ▶ 원유가격 상승 및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며, 공급 부족과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상방 리스크 발생이 우려됨
  - 예상보다 빠른 민간소비 증가로 수요는 증가한 반면,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로 인한 반도체 부족현상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
- ▶ 또한, 2020년의 축적된 초과저축(excess saving)으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대부분 OECD 회원국의 가계 저축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가계 은행예금 축적도 과거 대비 증가세를 보임
- ▶ 향후 시장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과거 소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으며, 위와 같은 수요 증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또한 낮음
  - 고소득 가구의 경우,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보다는 예금, 주식, 부동산 투자를 위해 축적된 예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, 이 경우 자산 가치 증가가 소비 증가 폭보다 더 클 수 있음

### ③ 노동시장 전망

- ▶ 2020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의 중위값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.3%p, 1%p 하락하였으며, 고객 대면서비스의 총노동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함
  - 미국과 일부 신흥국에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세가 나타났으며, 유럽과 일본의 경우 단시간 근로제도와 임금 보조금 등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으로 고용이 유지되었지만 대면서비스 부문의 총노동시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폭 하회함

[그림 2] 팬데믹 이전보다 약화된 노동시장



주: 1. 패널 A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15~74세 인구 대비 비율로 계산됨  
 2. 패널 B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20년 4분기, 그 외 국가는 2021년 1분기 데이터를 사용함.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총노동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며, 미국은 비농가(non-farm) 업종 노동자의 총노동시간 데이터를 사용함. 일본의 경우 총취업자 수와 취업자의 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추정함  
 3. 패널 B의 다접촉 부문은 소매매업, 숙박 및 식품 서비스, 운송·보관, 예술, 기타 개인 서비스가 포함됨

자료: OECD, *OECD Economic Outlook*, 2021. 5., Figure 1.5.



- ▶ 2021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6.75%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되며,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
  - 위기 이전 고용률이 높았던 국가들의 고용률은 향후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았던 국가들의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

#### ④ 통화 및 재정정책

- ▶ 선진국은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, 2020년 말 이후 정책금리와 장기채권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함
  - 일부 선진국은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, 2020년 말 예상보다 일찍 미국의 정책금리가 상승했으며 이후 장기채권 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임
  -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계속 구매했으며, 특히 유럽중앙은행(ECB)은 2020년 12월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 (Pandemic Emergency Purchases Programme: PEPP)<sup>1)</sup> 시행을 확대한 바 있음
- ▶ 전반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노동시장 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재정부양책 중단은 지양해야 함
  - 2022년 말까지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는 2019년 대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작스러운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지양해야 함
  - 특히, 디지털 네트워크, 교통,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위한 재정 조치는 이직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
- ▶ 탄소경제(low-carbon economy)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가격 책정 및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등을 포함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로드맵 제시가 요구됨
  - 환경 목표에 따른 기업 지원, 재생에너지 투자, 저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의 정부 조치를 통해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
  - 이 같은 조치 시행 시 저소득 가정, 소외지역 및 소규모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완화하고, 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

#### ⑤ 국내 현황(OECD 평가)

- ▶ 2021년 5월 기준, 지속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감소세를 보임
  - 2021년 6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,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(5월 21일 기준, 전체 인구의 7.3%가 최소 1회 접종)
- ▶ 경기회복세로 인해 전체적인 수출은 급증하고 있지만, 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1) APP(Asset Purchase Programme)는 1,2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공공부채(Purchases of Public Sector Securities: PSPP), 회사채(Corporate Sector Purchase programme: CSPP), ABSPP(Asset backed securities purchase programme) 등으로 구성되며, PEPP는 기존 APP에 추가로 2020년 말까지 7,500억유로의 코로나19 대응 자산매입을 시행

- 전체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IT 제품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대외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, 서비스 부문의 회복 제한으로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
- ▶ 2022년까지 안정적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3.8%, 2022년 2.8% 수준으로 전망됨
  - 거리두기 완화 및 점진적인 수요 확대는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,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한 강력한 정부투자는 향후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
  - 다만, 더딘 백신접종 속도와 국제적 긴장감은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며, 부동산 가격의 큰 변동성과 가계부채는 금융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
- ▶ OECD는 한국이 서비스업의 회복은 더디고 정부부채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으므로, 단기적으로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한 위기 극복의 확장 재정 지원 방향을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
  - 완화적(accommodative) 통화정책이 이에 발맞춰 지속되고 있으며, 2022년까지 인플레이션은 2% 이하로 예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있다고 진단
  - 하지만 OECD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가 정책 수립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덧붙여 언급함

〈표 2〉 한국의 경제 및 재정 전망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
시장가격 기준 국내총생산	2.9	2.0	-0.9	3.8	2.8
소비자물가지수(consumer price index) <sup>1)</sup>	1.5	0.4	0.5	1.8	1.4
실업률(unemployment rate, 노동인구 %)	3.9	3.8	4.0	4.0	3.5
재정수지(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, GDP %)	3.0	0.9	-4.0	-4.1	-3.5
국가채무(general government gross debt, GDP %)	41.9	40.9	43.8	47.2	49.7
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, GDP %)	4.5	3.6	4.5	7.2	7.1

주: 1) 식품,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

자료: OECD, *OECD Economic Outlook*, 2021. 5., p. 158

### 3 정책 시사점

- ▶ OECD는 타국과 비교 시 한국의 백신 수급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백신접종 저조가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에 걸림돌이 되어 민간소비 및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하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
  - 2021년 하반기부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사례 증가로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대책이 요구됨



- ▶ 또한, 강건한 정부·기업 투자, 특히 한국형 뉴딜정책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으나, 높은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가계부채는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
  -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의 억제, 주택 공급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, 특히 주택 공급의 경우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
- ▶ OECD는 앞으로의 정책 지원은 경제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한 회복 단계로 진입할 때까지 위기 상황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구와 소상공인,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
  - 김동겸(2020)은 직업군별 감염 위험도 차이, 경기불황에 의해 계층별로 이질적인 고용·소득 충격, 개인의 디지털 격차(Digital Divide) 등의 경로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, 임시직·일용직,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
  - 이러한 위기의 불평등은 건강·교육 불평등의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수
  - 이와 관련하여, OECD는 선별 지원(targeted support)이 보편 지원(universal assistance)에 비해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공공 재원의 유지에 도움이 되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음
- ▶ OECD는 궁극적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·녹색 경제의 변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
  - 환경친화적인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도구의 발전·보급이 경제 전체의 경쟁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발전 방향임을 인식하고 있으며, 이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

## [참고문헌]

OECD, *OECD Economic Outlook*, 2021, 5.

김동겸, 「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」, 『KIRI 고령화리뷰 Quarterly』, 제36호, 보험연구원, 2020, pp. 14~17.